“국립묘지 이장 비용 유족 부담이라니…”

제주도보훈청 행정사무감사서 김대진 의원 질타
지방정부 차원 지원 위한 제주도 조례 개정 시사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속보=국내 12번째이자, 제주 첫 국립묘지인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을 앞둔 가운데 유족들이 이장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 실태(**본보 9월13일자 3면 보도**)를 꼬집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왔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개인(국가·독립유공자 유족)이 돈을 내서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구조인데 이게 이치에 맞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국립제주호국원은 제주시 노형동 충혼묘지(1만6932㎡)를 포함해 노형동 산19-2번지 일대에서 27만4033㎡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1월 첫 삽을 뜬지 2년여 만인 오는 12월 개원을 앞두고 있다.

국립제주호국원은 봉안묘 5000기, 봉안당 5000기 등을 갖춰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유골과 시신 등 1만기를 안장할 수 있다. 또 6·25전쟁 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도 상해를 입지 않았거나 살아서 돌아왔다는 이유로 충혼묘지에 조차 묻히지 못한 고인의 유골과 시신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된다. 그동안 이들 고인의 시신과 유골은 개인묘지 등에 안장돼 왔다.

김대진 의원

제주도보훈청은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하면 유족의 신청을 받아 도내 14곳 충혼묘지 또는 개인묘지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시신 등을 호국원으로 이장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장 비용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로 이장할 경우 국립묘지로 운구(運柩)할 때까지의 비용은 유족이 부담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제주도보훈청은 국립제주호국원 개원 취지와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이장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립묘지법에 가로 막히면서 지원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립묘지에 안장되면 국가가 최대한 예우를 해주면서도, 국립묘지로 이장될 때까지는 예우를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가·독립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예외 없이 확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동희 제주도보훈청장에게 “조례(제주도 국가보훈 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장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냐”고 물은 뒤 “그렇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이장비 지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면서 조례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상민기자

“미등록 외국인 접종률 끌어 올려야”

도정 준비체계 쟁점 떠올라
이승아 “위드코로나 준비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

이승아 의원

속보=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 외국인)의 저조한 백신 접종률(**본보 10월7일자 4면 보도**) 향상 방안과 일상 회복을 위한 도정의 준비 체계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의 접종률이 저조한 데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제주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등록 외국인은 1530명이다. 도내 미등록 외국인이 1만700명 수준으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접종 완료율은 10% 남짓이다.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미등록 외국인들이 접종을 기피하고 있다.

제주도는 미등록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이 저조하다는 본보의 보도 후 별도의 예약 없이 예방접종센터(한라체육관)에서 이들이 바로 임시번호를 받고 접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양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미등록 외국인 백신 접종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접종률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위드 코로나에 따른 제주도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는 주문도 있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 확진자가 폭증할 수도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제주 현안에 맞게 모델별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위드 코로나 상황 대응사업을) 시범 운영하는데 제주도도 정부만 바라볼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상민기자

안동우 시장에 출마 권유

행정자치위원회

대선 도전에 나선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게는 ‘찬양’을, 안동우 제주시장에게는 도지사 출마를 ‘권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21일 제주시를 상대로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대륜동)은 ‘신화월드 프리미엄 전문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대통령 선거가 이상한 구도로 가고 있다. 이변이 일어날 것”이라며 “밑바닥 흐름에 엄청난 파도가 일고 있다. 원희룡 전 지사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동우 시장을 향해서는 “내년 제주자치도지사 선거에 여권 후보는 있는데, 야권에는 후보가 없다”며 “지사에 출마해서 제도의 벽에 막혀 하지 못했던 기초자치 부활과 공무원 수 증원 등을 실행하시라. 12월 이전에 결정해서 전화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동우 시장은 “제주시장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송은범기자

오등봉 특례사업 이번엔 ‘후분양’ 논란

세대 중 10%가 임대주택
임대 아닌 5~10년 후분양
“주거안정 아닌 수익 창출”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제주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하 오등봉 특례사업)이 이번에는 ‘임대주택 후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제주시를 상대로 제399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사진

이날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제주시는 오등봉 특례사업을 통해 지어지는 아파트 세대 중 10%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주거안정권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임대주택 대상이 청년, 장애인,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닌 임대 5~10년 후에 분양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앞서 도의회 도시계획심의 전에 제주시 관계자가 분명 ‘추가 분양이 없는 임대 개념’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5~10년 뒤에 분양을 하면 사업자 측에서 초과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실상 땅짚고 수익 얻기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또 “협약서 상으로는 사업자 수익률이 8.9%로 약정돼 약 700억원의 수익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토지 보상 등에서 예상 비용을 초과하면 곧바로 분양가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분양가가 인상되면 700억이 아니라 1200억원의 수익을 얻을 거라는 전망도 있다”고 덧붙였다.

안동우 시장은 먼저 후분양 지적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임대는 LH나 제주도개발공사를 통해(다른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짧게 답변했다.

반면 사업자 수익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초과수익(8.9% 이상)은 제주시가 100% 환수할 것”이라며 “협약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데, 법률 전문가들은 오히려 행정이 갑이고 사업자는 을이되는 협약서라 평가한다”고 자평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가축분뇨 처리 방식 다양화 해야”

김용범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 중립 노력해야”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의원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활용할 수 있게 처리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문이 의회에서 나왔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방·중앙·천지동)은 기존 “퇴·액비화 중심의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은 토양 양분의 과잉을 유발하기 때문에 변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 분뇨 처리 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탄소 중립을 위해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로 활용하는 등 에너지화하는 사업을 확대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면서 “그런데 가축분뇨 활용을 통한 탄소 중립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눈에 띄는 실적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선제적으로 노력하는만큼 제주도 역시 축산 분야의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 중립 정책 이행에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해 농·산업 용수로 이용할 수 있게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Silver Smile
노인학대신고
24시간 상담전화
1577-1389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www.sgpnoin.org
운영법인 :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그랜드 보청기
가을맞이 할인 이벤트!!
국내판매중 보청기 전제품 보상판매지원
10월 한달간 배터리 ₩20,000 ▶ ₩9,000 할인행사
2021년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초소형보청기
동영상 청취가능
「전문가 처방」 어플리케이션 소리조절 보청기로 음악청취/원격 비대면 조절
보청기 가격의 거품을 걷어냈습니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촌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렸수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한라일보 서사리 사거리 삼겹구이 2층
제주시 서광로 225 2층
제주시버스터미널 서사라 사거리 그랜드보청기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심의번호 2018-GN1-11-0011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원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원장 강동우
청각학석사
청능사
언어재활사
제주시청 제주대 CGV 와이덱스 보청기 화북 광양 사거리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 보청기 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간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제주은행 하나약국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파출소 국제보청기 (국제기계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